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이티 인권 보고서

개요

해당 연도 아이티의 인권 상황은 갠단 폭력 확산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국가 역량의 부족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가 축소되면서 현저히 악화되었다.

신빙성 있는 보고에 따르면, 주요 인권 문제로는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해,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분쟁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 언론인에 대한 폭력 및 협박을 포함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그리고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공직자를 색출해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포르토프랭스 일대에서는 갠단 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되었다. 무장 갠단은 살인, 민간인 공격,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시신 훼손, 대규모 이재민 발생, 그리고 주택 및 재산 파괴 등을 자행하거나 야기했다. 정부가 갠단 소탕 작전을 지속하고 일부 일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갠단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나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갠단 조직원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202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인물을 대상으로 한 구타, 신체 훼손, 살해 등 자경단에 의한 폭력 사례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폭력은 때때로 조직된 시민 자경단체에 의해 자행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자경단 폭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를 하지 못했다.

제1절. 생명권

가. 초법적 살해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 및 정부 요원들이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해를 저질렀다는 보고가 수차례 있었다.

비정부기구(NGO)인 국가인권수호네트워크(National Human Rights Defense Network)는 지난 2월 반정부 시위 당시 발생한 일부 시위대와 언론인의 사망 및 부상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니프(Nippes) 주에서는 검사인 에르네스트 뮌스카댕(Jean Ernest Muscadin)이 적법절차 없이 갱단 연루 혐의자 처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행동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뮌스카댕 검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니프(Nippes) 주를 '범죄자들의 무덤'이라 지칭하며, 갱단 혐의자를 처형한 자신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다수의 지역 주민은 뮌스카댕 검사의 이러한 행동을 지지했으며, 그의 해임을 막기 위해 연중 내내 결집했다.

202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한 해 동안 자경단에 의한 살해에 경찰이 연루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가 잇따랐으며, 여기에는 당초 경찰에 구금 중이던 피해자가 결국 살해된 사례도 포함되었다. 아이티 크레올어로 ‘나무 껍질 벗기기’를 뜻하는 일명 ‘브와 칼레(bwa kale)’로 알려진 이러한 행위에는, 군중이 표적을 집단 구타하거나 신체를 훼손한 뒤 살해하는 방식이 포함됐고, 때로는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11월, 국제 비정부기구(NGO) 국경없는의사회(MSF)는 포르트프랭스 병원으로 총상 환자 3명을 이송하던 구급차를 경찰이 저지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의료진과 환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군중이 환자들을 끌고 가 처형하는 것을 목인했다. 환자 3명 중 단 1명 만이 살아남았다. 이 사건의 여파로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 중단을 결정하자 정부는 해당 공격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아울러 아이티 국가경찰(HNP) 감찰관실은 경찰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수사는 연말까지 계속되었다.

당국은 2021 년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ïse) 대통령 암살 사건을 비롯해 그랑 라빈(2017 년), 벨 에어(2018 년), 시테 솔레이유(2020 년)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습격 사건 등 주요 살인 사건 수사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2018 년 라 살린(La Saline) 학살 사건의 경우, 지난 7 월 담당 판사가 용의자로 특정된 30 여 명에 대한 형사 기소를 권고하며 수사 종결 명령을 내렸다. 또한 당국은 2019 년 네헤미 조제프(Néhémie Joseph) 피살 사건에 대한 장기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판사를 통해 전 상원의원인 로니 셀레스틴(Rony Célestin) 및 공범 7 명을 ‘살인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유엔아이티통합사무소(Integrated Office in Haiti, BINUH)에 따르면 1월부터 6월 사이 갠단 폭력으로 인해 3,88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살자의 96%가 포르토프랭스를 포함한 서부(West) 주에 집중됐다. 1분기에는 갠단 연합이 아리엘 앙리(Ariel Henry) 총리 정부에 맞서면서 포르토프랭스의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교도소에서 수감자 4,600명 이상이 탈옥했고, 최소 22곳의 경찰 시설이 습격당했으며, 경찰관 19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치명적인 갠단 폭력사태가 한 해 동안 계속되었다. 유엔아이티통합사무소(BINUH)에 따르면 1분기는 2022년 초 이래 가장 폭력적인 시기였다. 1월부터 3월 사이 폭력 사태가 급증하여 상반기 전체 사상자 3,884명 중 대다수가 이 기간에 집중되었으며, 갠단의 민간인 공격 및 갠단 간 충돌로 인한 사상자는 최소 2,5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53% 증가한 수치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HCHR)에 따르면, 갠단은 조직 활동을 신고하거나 반대의사를 표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살해했다. 일부 피해자는 마체테(정글도)로 신체가 훼손된 뒤 불태워졌다. 갠단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통제하기 위해 해당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에 광범위하게 유포했다.

12월 초 갠단 지도자 미카노르 '미카노' 알테스(Micanord 'Mikanò' Altès)는 시테 솔레이유(Cité Soleil) 내 와프 제레미(Wharf Jérémie) 지역의 노인들이 부두교(Vodou) 의식을 통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병들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믿고, 이들에 대한 학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시민단체의 사건 조사는 갭단이 해당 지역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잠재적 목격자에 대한 협박과 살해까지 자행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비정부기구(NGO)와 유엔이 현지 주민과 접촉해 파악한 잠정 사망자 수는 50명에서 2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는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번 사건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할 수 없는 당국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나. 인구 통제 강요

정부 당국에 의한 강제 낙태나 비자발적 불임 시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제2절. 자유권

가. 언론의 자유

헌법은 언론 및 기타 매체 종사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정부는 대체로 이러한 권리를 존중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해당 권리가 항상 보장되거나 존중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 군, 정보기관, 경찰, 범죄 조직, 무장 극단주의 단체 또는 반군에 의한 검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3월 수도 소재 주요 교도소 두 곳에서 갱단 지도부가 탈옥한 이후, 3월부터 6월 사이 언론인, 인권 옹호자 그리고 판사와 경찰관 등 공직자를 겨냥한 갱단의 위협 및 공격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의 가족 또한 위협을 받았다. 일부 위협 행위는 갱단 지도부가 직접 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다수의 언론인은 자기 검열을 하거나 직업을 포기하고, 급기야 국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갱단 폭력 사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갱단의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보고했다.

2월 7일, 라디오 폴트롱(Radio Poltron) 기자인 알랭 샤를(Alain Charles)이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었다. 이는 그로 모른(Gros Morne) 일대 농촌 마을을 표적으로 한 갱단의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노동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법률은 공공 부문 근로자를 제외한 일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이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제한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여 협약 체결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상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되었으나, 개별 위반 사례마다 사용자 처벌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했다. 나아가 해고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을 해고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매우 낮았으며, 구제 수단으로서의 복직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법률은 5인 이상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했다. 동 법은 파업의 유형을 작업장 내에서 업무를 중단하는 ‘침묵 파업’, 사업장 내에 머무르는 ‘경고 파업’, 사업장을 벗어나는 ‘이탈 파업’, 그리고 타 파업에 연대하는 ‘연대 파업’ 등 네 가지로 명시했다. 합법적 파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침묵 파업은 24시간을, 경고 파업 및 이탈 파업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고, 연대 파업은 최초 파업이 합법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 및 공기업 근로자의 파업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업무를 중단할 경우 개인의 건강과 공공 안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파업은 48시간의 사전 예고 기간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며, 파업 당사자 중 일방은 파업 종단을 위해 강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포르토프랭스에 위치한 노동법원은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의 감독을 받으며 민간 부문 노사 분쟁을 심리했다. 포르토프랭스 외 지역에서는 원고가 노동 분쟁 시 지방법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법률상 사전에 사회부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시민권 침해 등 유사 위반 사례에 비해 더 낮았으며, 실제 위반자에게 처벌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사법 절차는 장기간 지연되거나 항소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민간 고용주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노동 감독단체는 파업 조직 또는 폭력 조장을 이유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정직, 해고, 그리고 노조원에게 가해진 기타 보복 행위를 보고했다. 코데비 자유무역지구(Codevi Free Zone, CODEVI)의 노사 단체협약은 지구 내 모든 공장이 근로자를 ‘고용재해·질병·출산보험국’에 출산 및 건강보험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는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근로자는 정부가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되었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는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정 근로 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법

법률은 국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최저임금은 통상 공식 거시경제 지표를 토대로 정부가 최소한 연 1회 책정했으며, 그 수준은 대체로 국가 빈곤선을 상회했다. 정부가 2월에 노동조합,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를 재설립했으나, 위원회는 규정된 임무였음에도 최저임금 개정 권고안을 전달하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정부는 2023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한 추가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다.

노동법은 표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 명시했다. 산업 부문 사업장의 경우, 1일 정규 근로시간을 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비정부기구(NGO) 베타 워크 아이티(Better Work Haiti, BWH)는 2023년 7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의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다룬 ‘제27차 아이티 반기 이행 종합보고서’에서, 모니터링 대상 공장의 52~92%가 연장 근로수당, 사회보장 부담금, 유급 휴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근로 보상을 정확히 산정해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률은 공장 내 간호사 상주, 의료 서비스 제공, 연례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최소 규정을 수립하고, 주요 산업군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률은 근로자가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 또는 상황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 요인의 완화, 직장 내 건강 증진 정책 강화, 정부가 집행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실제로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 법률상 근로자는 고용상 불이익 없이 위험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안 불안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제 27 차 반기 이행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베타 워크 아이티(BWH)가 모니터링한 의류 공장 60% 이상이 화학물질 라벨링 및 재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지만, 유해 물질 보관이나 근로자 대상 적절한 교육 등 다른 기준의 미준수 사례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규정 집행

만연한 치안 불안으로 현장 점검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집행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법 집행은 사회노동부 소관이었다. 포르토프랭스 지역 내 사업장 점검은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제한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과 현장의 물리적 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감독관 수는 충분했으나, 때로는 차량이나 연료 등 필수 자원이 부족했다. 사회노동부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일부 점검을 실시하긴 했으나, 대다수 점검은 베타 워크 아이티(BWH)가 점검을 지원한 의류 산업 부문에만 집중됐다.

근로시간, 임금 및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기 등 유사 범죄에 비해 경미했으며, 실제 위반자에게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법상 근로감독관에게는 불시 점검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제재 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법 집행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비공식 분야 종사자는 전체 노동 인구의 87%를 차지했다. 민간 부문 최대 고용주인 주요 의류 제조업체 대다수가 갯단 폭력 사태로 인해 시설을 폐쇄하거나 국외로 철수한 여파로, 최근 몇 년간 비공식 분야가 성장했다. 정부는 비공식 분야에서는 노동법을 집행하지 않았다.

다. 실종 및 납치

실종

정부 당국이나 정부 대리인에 의한 강제 실종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유엔아이티통합사무소(BINUH)는 6월 30일 기준 총 866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 최소 66%가 아르티보니트(Artibonite) 주에서 발생했으며, 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거나 몸값을 목적으로 자택에서 납치되어 억류된 피해자들이었다. 포르토프랭스 수도권 중심부에서는 납치 사건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카르푸(Carrefour)와 그레시에(Gressier) 등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빈발했다. 12월 13일, 그랑 라빈 갯단이 포르토프랭스와 카프아이티앵(Cap-Haïtien)을 오가는 선박을 탈취해 승객과 승무원 52명을 납치했다.

기소 없는 장기 구금

법률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며, 누구든지 법원에서 체포나 구금의 적법 여부를 다룰 권리를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다.

법원 규정의 자의적 적용, 사법 재량권의 남용, 부패, 그리고 부실한 기록 관리로 인해 불법적인 장기 미결구금 문제가 계속됐다. 일부 피구금자는 법정에 서보지도 못한 채 수년간 억류되기도 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검찰청의 석방 명령서 발급이

지연되어 형기를 마친 수감자들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심지어 일부 피구금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법정 최소 형량보다 더 긴 기간을 미결구금 상태로 보내기도 했다.

라. 종교의 자유 침해

미 국무부의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인신매매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는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신체의 안전

가. 고문 및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헌법상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비정부기구(NGO)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티 국가경찰(HNP) 소속 경찰관이 피구금자와 용의자를 간혹 구타하거나 학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티 국가경찰(HNP)에 대한 불처벌 관행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경찰관 사이에 광범위한 비위 행위가 만연하다고 주장했고, 그

주된 원인으로 부실한 훈련과 전문성 부족을 지목했다. 유엔아이티통합사무소(BINUH) 보고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국가경찰(HNP) 감찰관실은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경찰관 39명이 연루된 31건에 대한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 중 종결되거나 연루자가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가인권수호네트워크는 8월 발생한 조제메 조제프(Joseme Joseph) 고문치사 사건이 레카이(Les Cayes) 검찰청 검사인 제임스 장 루이(James Jean Louis)가 사주한 것이라는 혐의를 제기했고,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루이 검사에게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고, 시민단체들은 그의 기소를 촉구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갱단이 주민을 처벌하고 공포를 조장하며 굴복시키기 위해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 사이 최소 4,000명의 여성과 여아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다수의 사건은 갱단원에 의한 집단 강간이 많았으며, 때로는 수일에서 수주간 반복되는 성폭행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공격 상당수가 대낮에 발생했으며, 이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많은 피해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신체적 피해가 심화되었고, 이는 성병 감염과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졌다.

나. 아동 보호

아동노동

미국 노동부의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보고서’는 <https://www.dol.gov/agencies/ilab/resources/reports/child-labor/finding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 혼인

법정 혼인 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15세였다. 조혼과 강제결혼이 보편적인 관습은 아니었으나,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강제결혼이 간혹 행해졌다.

다. 난민 보호

정부는 유엔난민기구(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난민, 귀환 난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그 밖의 보호 대상자들에게 보호 조치를 취했다.

최초 망명 제공

법률은 아이티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망명을 허가하도록 규정했으며, 정부는 난민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제3국 국민은 현지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를 통해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다.

라. 반유대주의 행위 및 반유대주의 선동

유대인 공동체 인구는 100명 미만이었다. 반유대주의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